

왜 다시 언론인 윤리인가?

언론계 비리, 개인 일탈 넘어 구조적 문제로 고착될 조짐

김서중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근 뉴스타파의 ‘박수환 문자’ 보도는 홍보대행사를 중심으로 한 경제 자본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만인에게 알렸다. 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각종 광고성 기사로 인해 저널리즘의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언론은 존재 이유의 상실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점차 부각되는 새로운 매체와 플랫폼에 대응해 기존 매체의 존재적 차별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타파는 2019년 1월 28일부터 8회에 걸쳐 이른바 ‘박수환 문자’를 보도했다. 홍보대행사인 뉴스컴의 박수환 대표가 언론인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기업을 대신해 명품 백을 선물하고, 언론인의 장거리 해외 여행 항공권을 기업이 제공하도록 주선했다는 의혹이다. 또 역으로 이 언론인들이 박 대표의 부탁을 받고 청탁성 기사를 넣거나 비판 기사를 뺀 정황이 있다는 보도였다. 저널리즘의 윤리가 실종된 사건이다.

언론계 비리에 둔감한 언론

뉴스타파가 박수환 문자의 내용에 따라 기사 게재 여부를 추적해보니, 실제로 요청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흔히 말하는 광고성 기사였다. 문제는 그 기사에 광고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

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광고(AD) 본부장은 이것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결과다. 조선일보 데스크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기사 작성은 해오고 있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장려하고, 독자에게는 좋은 기업·제품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를 동시에 담은 만큼 광고를 기사인 것처럼 속인 것은 아니다”¹⁾라고 말했다. 오래된 관행과 만연한 풍토로 인해, 돈을 받고 광고(홍보)용 기사를 취재 기사인 양 게재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발행 1위를 자랑하는 조선일보나 주요 경제신문 중 하나인 한국경제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사실도 경악스럽지만, 이러한 일들이 조선일보나 한국경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뉴스타파는 같은 기사에서 홍보업계가 박수환 문자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본다는 사실을 전했다. 박수환 문자로 확인된 언론과 기업의 부적절한 관계는 오랫동안 언론계의 보편적 관행으로 정착했다는 주장이다.

그 때문인지 뉴스타파가 언론계의 치부를 드러낸 박수환의 문자 내용을 보도했지만, 다른 언론들은 후속 보도를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언론계의 비리를 보도했다는 사실만이라도 보도할

1) <https://newstapa.org/44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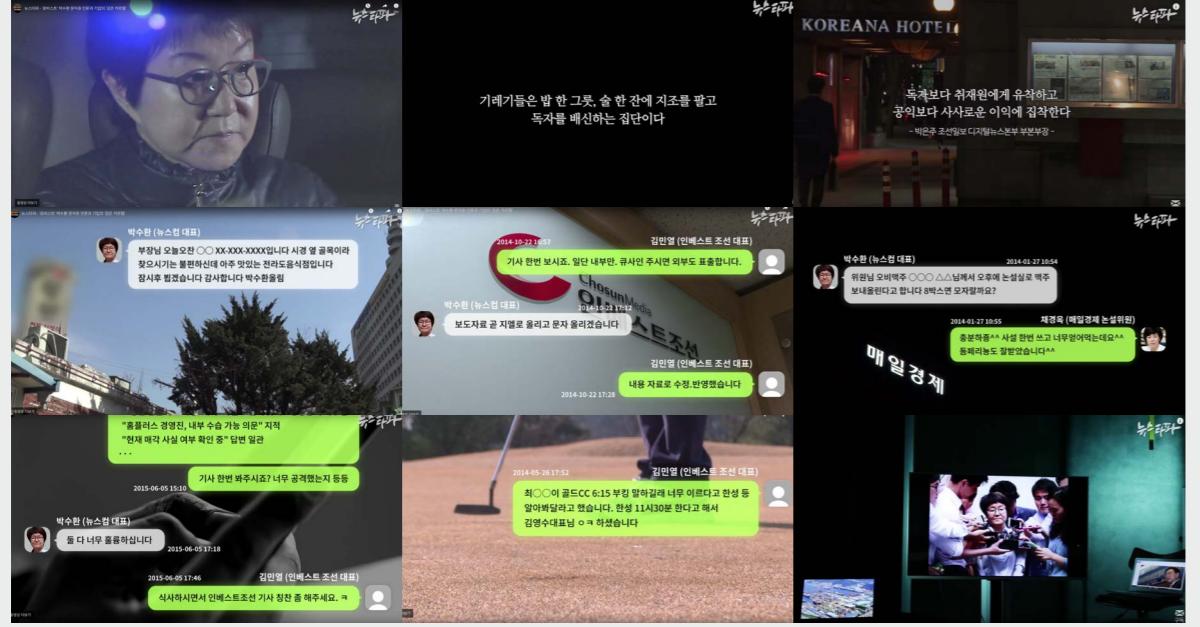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대표. 그가 2016년 8월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자 기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만 한데 그렇지 않았다. 비리 불감증일까? 아니면 공범자들의 방어 본능일까?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언론의 무보도 행태는 어떤 의미로든 분석하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3월 20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전국 단위 9개 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6개 경제지(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6개 인터넷 언론(CBS노컷뉴스, 뉴스1, 뉴시스,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지상파 4사(KBS, MBC, SBS, OBS), 4곳의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 2곳의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 등 31개 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 보도본부장들에게 무보도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만약 이번 비위 사건이 언론이 아닌 사법부, 국회, 청와대 등에서 일어난 것이었어도 보도하지 않았겠냐는 의문을 바탕에 깔았다. 더불어 ‘박수환 문자’로 드러난 언론과 기업 유착 문제, 기사 거래의 무보도 문제, 편집·보도국장(보도본부장)이 생각하는 보도 가치, 편집국·보도국 내에서 보도가 필요하다는 내부 발제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기획보도 계획이 있는지, 자사 편집·보도국 내부에 실태 점검과 기자윤리실천을 위한 논의 실행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지만 답변을 보내온 것은 YTN뿐이었다. 그것도 박수환 문자가 뉴스타파만 가지고 있는 정보라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보도를 할 수는 없었고, 뉴스타파 기사를 (의미 있게) 평가한 바는 있으나 내부에서 보도 발제는 없었고, YTN은 자체 윤리강령과 실천 기준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뉴스스타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언론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 <출처 - 뉴스타파 2019. 2. 15 유튜브 캡처>



서울 택지개발 비리를 첫 보도한 1991년 2월 3일자 세계일보 1면. <출처 - 세계일보 캡처>

규모가 가장 큰 신문에서 발생한 비리이고, 홍보대행 사들의 반응처럼 이미 언론계에 만연한 실정이라면 보도 가치는 이미 충분한 사안이다. 보도 가치를 인식했다면 뉴스타파에 협조를 요청해 정보를 얻고 추가 취재를 하는 협업도 가능했을 것이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장기 취재 기획이라도 했어야 하는 사안이지 않을까? 백번 양보해서 책임 있는 보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언론계에 만연한 현상이라면 언론사 자체 내부 조사와 더불어 재발 가능성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불충분한 YTN의 답변은 차치하고 아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주요 언론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김영란 법과 언론인: 비리에도 반성하지 않았던 언론

사실 언론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1991년 '수서비리 촌지사건'이나 보사부 촌지사건, 2001년의 '패스21' 사건 그리고 언론인, 언론사의 주식투자(취재 정보 이용) 사건 등 유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수서비리는 1991년 세계일보 이용식 기자의 특종으로 알려졌다. 수서지구는 애초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땅이지만 한보 건설 정태수 회장이 택지 조합 임원들과 함께 국회 청원, 국회·정부 관계자 뇌물 제공, 청와대 압력 등으로 특혜 공급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남긴 비리 사건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수백, 수천만 원의 촌지를 돌렸다고 알려졌으며, 1997년에 동아일보가 보도한 한보 리스트에 수십 명의 중견 언론인이 등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보도가 기자들에게 반성의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991년 보사부 출입 기자들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제약업체, 식품업체, 현대아산재단, 대우, 서울언론재단을 비롯해 장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시내 버스비가 170원 하던 시절에 촌지로 8,850만 원이나 모았으니 엄청난 액수였다. 이 사건 보도 이후 곧바로 각 언론사들이 반성하는 기사를 실었고, 기자윤리강령이 제정되고 기자단을 해체하거나 탈퇴하는 등 자정 바람이 일었다. 하지만 돈을 수수하는 행위가 갖 아들었을 뿐 호화 외유나 골프 접대, 주식 로비나 부동산 정보 수수 등으로 변형됐다는 것이 언론계의 정설이었다. KBS기자협회는 2001년 촌지 대신 문제로 부각된 골프 접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네 가지 금지지침을 정했다고 한다. 제대로 반성하는 계기를 갖지 않는 한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위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도 포함되는 결과를 자초(?)했다. 언론 일각에서는 정부나 공권력이 법적으로 언론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했으나 법은 통과됐다. 이에 기자협회가 뒤이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정을 내렸다. 현재는 언론인을 '공무원에 범금과 정도의 공정성·청렴성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주에 넣고 '업무의 공공성, 청탁 관행이나 접대 문화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정도, 국민의 인식,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규제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보았다.²⁾

사실 언론의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최소화하

2) 헌법재판소(20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원 확인.

URL: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RealmPrecedentInfo.do?searchClassSeq=508>

“

박수환 문자 폭로로 유착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수용자의 이탈이 늦춰졌을까.

박수환 문자 사건의 본질은 언론에 광고(협찬)나 촌지와 같은, 거래로 생산되는 기사가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광고성 수준의 기사로 떠나는 수용자를 붙잡을 수는 없다.

언론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

는 것이 맞다. 하지만 김영란 법에 언론인이 공무원에 준하는 대상자로 포함된 것은 언론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인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 이는 역으로 언론이 그동안 불신을 쌓아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언론계는 현재 판결로 김영란 법 준수가 불가피해지자, 다시 이전의 촌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처럼 반성문을 내놓거나 결의를 다졌다.

구조화된 언론계 비리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박수환 문자가 터진 것이다. 보사부 촌지 사건 이후 접대 방식이 달라졌듯, 김영란 법 이후 법 규정에 맞춰 식사 대접의 양상은 달라졌지 모르지만 언론계의 비리 자체가 근절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박수환 문자로 상징되는 언론계 비리는 예전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거에는 촌지든 접대든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리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었다. 뉴스타파 기사에서 보듯 홍보대행사가 낸 언론과 경제 자본의 유착은 보편화됐다. 공개적인 광고 대신 광고성 기사를 양산하는 ‘협찬’은 더욱 늘어나고, 광고성 기사로 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 등 저널리즘 원칙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저널리즘 원칙의 붕괴가 신뢰성의 상실 그리고 언론 존재 이유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시절에도 박수환 문자 못지 않은 언론계 비리나 경언유착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언론의 위기에 직결되지는 않았다. 그때는 언론 산업의 황금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플랫폼 환경의 변화로 수용자들이 기존 매체를 떠나는 중이다. 이미 언론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상파 광고는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중이고, 모바일 부문의 광고비는 전통적 매체의 광고 수입을 훌쩍 초월했다.

기존 매체는 기술 변화로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수용자를 잡아야 하는 절체 절명의 위기에 봉착해있다. 때문에 신뢰성 하락은 기존 매체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박수환 문자 폭로로 유착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수용자의 이탈이 늦춰졌을까. 박수환 문자 사건의 본질은 언론에 광고(협찬)나 촌지와 같은, 거래로 생산되는 기사가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광고성 수준의 기사로 떠나는 수용자를 붙잡을 수는 없다. 언론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물론 이처럼 언론의 위기가 심화된 데에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권은 공영 방송을 비롯한 공영 언론을 장악했다. 부당한 이유로 사장을 축출하거나 대통령의 측근을 사장에 앉혔다. 현업 기자와 PD들은 해직되거나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되었

다.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려던 언론인은 징계했다. 보도는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디어 관련법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무려 4개의 종편을 출범시켰다. 방송사 뉴스에 보수 성향의 4개 신문사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어서 언론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졌다. 한 때 1, 2위를 달리던 공영방송 KBS, MBC의 신뢰도는 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추락했다. 이렇게 언론 전반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수용자들은 언론을 떠났다. 비록 정권이 벌인 언론 장악의 결과이지만 해결은 매체의 몫으로 남았다.

저널리즘 윤리, 가치 회복이 답

언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남재일 교수 (2010, 78-79)는 언론 현상에 ‘시민사회 - 언론사주 - 기자 집단’ 3자의 규범적 합의 관계가 존재하고, 저널리즘 원칙을 유지하는 데 이에 대한 준수가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³⁾ 시민사회는 기자들이 공익성을 약

2016년 8월 26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호화 전세기를 이용해 유력 언론인과 함께 유럽 여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속하는 대신,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대리하는 것을 용인(여론의 전달자 인정)한다. 언론사 역시 공익성 보장을 약속하고, 대신 매체 영업권(‘시민들의 이용’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영업 수익)을 부여받는다. 또한 언론사주와 기자들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여론 전달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상업적 이윤 추구 행위의 정당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언론이 저널리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언론 존립의 근간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그러한 신뢰 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언론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언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작금 언론 위기의 본질이다.

문제 해결은 본질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기술적 변화를 추종하는 자세를 벗어나 기존 매체의 존재적 차별성과 본질이 무엇인지 재인식하고, 이를 회복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기존 매체가 새로운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저널리즘 가치의 회복이 답이다. 즉 잃어버린 신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박수환 문자를 애써 외면하지 말고 자성의 차원에서 언론계의 환부를 찾아 도려내고, 저널리즘 윤리와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존이라는 단기적 과제에 매몰되어 장기적 경쟁력인 신뢰성을 상실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박수환 문자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 유착의 고리를 끊고, 언론 본연의 가치인 비판·감시·견제 기능을 되살려야 언론이 생존 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저널리즘 윤리 회복이 중요한 이유다. ■

3) 남재일(2010). 직업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보, 73-93.